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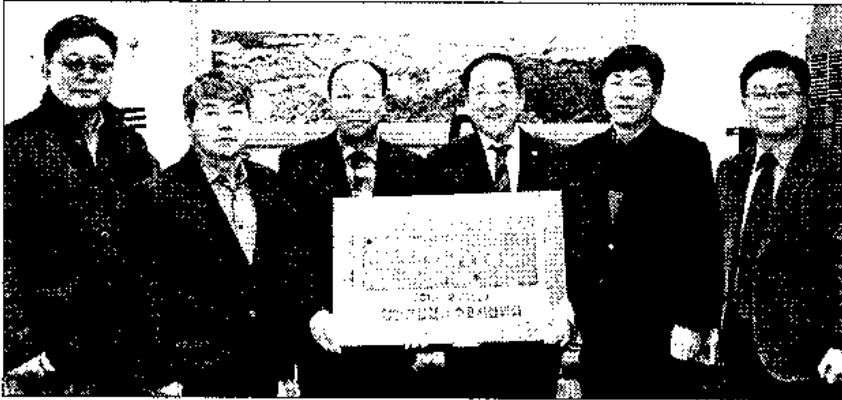
**【 2015.12.22(화) 강원일보 】**



**(주)경동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주)경동 송재호 회장과 임직원들은 21일 삼척시 도계읍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민주평통 양양군협의회 남옥희 자문위원이 21일 원주 호텔 인터블고에서 열린 자문위원 의장표창 전수식에서 민평통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일반건설협 속초시협** 일반건설협회 속초시협의회는 21일 이병선 시장에게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도 인사폭 축소된다

### 일부 간부 용퇴 거부

강원도가 실·국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일부 고참 국장들에게 용퇴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인사 폭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배진환도 행정부지사는 주말인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도청 기자회견에 나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빚어진 도정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오는 23일 실·국·과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실·국장 전면 물갈이 인사를 위해 그동안 정년을 1~2년 앞둔 일부 고참급 국장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

하도록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58년생으로 정년을 2년 남겨둔 안병현 녹색국장과 최형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이 옷을 벗기로 했다. 이들은 도청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긴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일부 간부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킬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퇴할 경우 도청 산하기관 이동 등을 제안했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인사 당시 연말 명퇴를 약속했던 일부 간부들이 말을 바꾸면서 이들과 마찰을 빚는 등 인사 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오인



## 중심제 심사기준 최종안 윤곽

# ‘고난이도 공사’ 단가심사 제외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 고정비용 비중 따라 탄력 운용  
동점자 처리기준 ‘균형가격 근접자’ 뺀 4단계로 축소

내년 종합심사 낙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심사기준 최종안 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반공사에 대해 단가 심사를 실시하고 고난이도 공사에 한해선 단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단가 심사 과정에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의 적정성 범위를 고정비용 비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동점자 처리 기준은 기존 2순위였던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뺀 4단계로 축소했다. ▶관련기사 2면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만들어 발주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단가 심사 실시 대상을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다.

일반공사의 경우 세부공종별 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가 심사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고난이도 공사로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선 단가 심사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균형가격 산정 방법은 입찰서가 20개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는 등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단가 심사와 관련해선 세부공

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표준시장단가 공종 등 고정비용이 전체 공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pm 18\% \sim \pm 22\%$ 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대금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는 하도급 계획은 하도급 예정인 모든 하도급 계약을 계약건별로 심사하도록 했다.

입찰금액 분야에 반영되는 물량 심사와 시공계획 심사, 계약실행도 분야의 시공계획 위반 심사는 단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 당초 공사수행 능력 점수, 균형가격, 저가 투찰자,

시공 여유율, 추천 순에서 균형가격을 제외해 저가 투찰자가 동점자 처리 기준 2순위로 올라가게 된다.

동종그룹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과거 시공평가가 결과를 심사하는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시공평가는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되 오는 2017년 말까지는 올해 1월1일 이후 시공평가 자료로만 심사하도록 했다. 시공평가 자료가 3년 이상 축적되는 2017년 말까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계약예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